

## 1992년 3월 16일 제123회 참의원 예산위원회

○ 일시: 1992년 3월 16일(월) 오전 10시 1분 개회

○ 발언자:

- 구보 와타루(久保亘) 의원(일본사회당 소속 참의원 의원, 중의원 의원, 부총리, 대장대신, 일본사회당 서기장, 사회민주당 부당수, 민주개혁연합 최고고문, 민주당 참의원 의원 회장)
- 미야자와 기이치(宮澤喜一) 내각총리대신(대장성 관료, 정치가, 자민당 소속 참의원 의원, 경제기획청 장관, 중의원 의원, 통상산업대신, 외무대신, 내각관방장관, 부총리, 대장대신, 우정대신, 농림수산대신, 재무대신, 자민당 총무회장, 자민당 총재)
- 가토 고이치(加藤紘一) 국무대신(외무관료, 정치가, 자유민주당 소속. 방위청 장관, 내각관방장관. 자민당 정무조사회장·간사장, 후쿠오카 시장, 일본중국우호협회 회장·명예회장)

○ URL: <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12315261X00219920316&spkNum=220&current=56>

○ 해제(개요 및 특징)

**위안부**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한 구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야자와 총리는 피해자 개인의 제소권은 인정된다고 답변함. 가토 대신은 한반도 출신 **위안부** 문제를 성실히 조사해서 발표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약속함.

○ 주요 내용 번역

- ▷ **구보** “(전략) 총리는, 1월 14일이었습니까,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에서 한국 기자단과 회견하신 적이 있습니까?”
- ▷ **미야자와 국무대신** “있습니다.”
- ▷ **구보** “그 당시 **중군위안부** 문제에 관해,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?”
- ▷ **미야자와 국무대신** “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일한 국교 정상화에 의해 해결된 것은 분명하지만, 한국인 개인이 우리 개개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소멸되지 않았다, 이렇게는 말했습니다.”
- ▷ **구보** “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. 한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산 증인이라고 할 만한 인물을 저희 동료도 본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해 두었습니다. 이 일에 대해서는 부디 위원장이 협력해주시기를 바

랍니다. 괜찮겠지요?”

- ▷ **나카무라 위원장** “문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.”
- ▷ **구보** “이 사실을 조사하는 데 정부도 전면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까?”
- ▷ **가토 국무대신** “조선반도 출신 **중군위안부**들의 당시 상황 등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도 충분히 성심성의껏 조사할 생각이고, 그 조사 결과 등을 적당한 시기에 밝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”